

#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새만금이 최적”

### 민주 이원택 의원, 이 대통령 “지역에 조성될 경우 세계 혜택 등 인센티브 줘야” 취지 발언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현실적으로 새만금 지구에 조성될 수 있는 실용적 사고를 같이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최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전환점이 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이전은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기업에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경우 세계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가 그동안 정치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날 이 대통령의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더라도 지역에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좋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이미 가동되고 있거나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 특정 지역으로 옮겨가는 뜻은 아니지만 향후 기업 의지에 따라 새만금에 추가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수 있는 활로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이른바 이상보라는 호

과나 효율 및 실행 가능성을 중시하는 실용적 사고는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문제는 이전 여부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이 조건”이라고 말하며 접근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선언이나 지역 간 경쟁 구호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집권과 응수라는 산업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삼성과 SK 등 대기업의 RE100 전환 계획을 언급하며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를 수도권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과 이 의원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접근 방식이 현실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실용적 사고를

같이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냉철한 현실 인식 아래 미래를 예측하는 시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전과 대안 등이 맞닿아 있어 향후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넘어 전북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이의원의 정책 방향이 국가 발전과 전북 미래를 놓고 관통하면서 ‘이심전심(李心傳心)’이라는 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 의원은 “반도체든 가전이든 첨단 제조업이든 기업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생존 조건이다”며 “전력과 응수라는 두 축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산업도 내려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이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추면 우리가 거꾸로 내려올래, 말래(반도체 클러스터)”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희성 기자

# “전북 대도약 전기 마련하겠다”

### 민주 전북도당, 지역 국회의원 2명 당 지도부 입성에 한병도 의원 ‘원내대표’·이성운 의원 ‘최고위원’ 당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당 지도부에 새롭게 합류한 전북지역 의원들과 손을 잡고 전북 발전을 위한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당은 지난 11일 입정문을 통해 최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성운 최고위원(전주)과 한병도 원내대표(익산)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혁신을 주도하고 민생·개혁의 가속 페달을 밟아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도당은 국민과 당원이 민주당에 내린 준엄한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란 세력 청산과 민주 헌정 질서 회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당심이 확인됐다

고 분석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정청래 당대표, 박지연 최고위원 등 기존 지도부는 물론, 이번엔 합류한 이성운·강득구·문성복 최고위원,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당·정·청 윈윈 체제를 구축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북도당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해결하는 정치’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에서 이성운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당선과 한병도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됨으로 인해 전북 정치권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오만호 기자

# 혁신당 도당, “해묵은 전북지역 일당 독점 정치구조 문제 있다”

### ‘돈공천 근절 4법’ 촉구 신영대 의원직 상실에 “민주, 오는 6월 재보궐 무공천으로 책임져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을 계기로 전북 지역의 해묵은 일당 독점 정치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도상 위원장과 대변인단 등 당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 조작과 부패로 얼룩진 공천 시스템을 바로잡고 전북 정치의 정의를 시민의 손으로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서 정도상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신영대 전 의원의 여론 조작 사건을 ‘전북 정치의 고질병’이 드러난 침묵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후보들이 정책 대결 대신 대표론 동원과 여론 조작이라는 반칙에 매몰됐다”며, 이는 도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패 행위라고 성토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도상 위원장과 대변인단 등 당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 조작과 부패로 얼룩진 공천 시스템을 바로잡고 전북 정치의 정의를 시민의 손으로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경쟁이 사라진 독점 구조가 지역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의 54.4%와 광역의원 선거구의 54%에서 투표율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등 유권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부패 정치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돈공천 근절 4법’ 추진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시 20년간 피선거권 박탈 △장비별 벌금형 도입 △해당 정당 후보 추천 금지 및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수사 당국을 향해 지역 내 만연한 여론 조작 의혹

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에는 이번 신영대 전 의원 지역구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당 관계자는 “오는 6월에 치러질 2026년 지방선거는 조직인 승자가 아닌 도민의 살아있는 민심이 승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전북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 ‘공공미술 작품 고의 훼손 금지’

### 민주 윤준병 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문화예술훈합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미술 설치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어, 작품 훼손이나 특정

세력의 소란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작품을 손괴·이동·은닉하여 가치를 훼손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작품을 비방·모욕하여 관람을 방해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윤 의원은 “공공미술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테러성 훼손 행위를 뿌리 뽑고 성숙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 “지방의회 행감 관련 처벌 규정 강화”

### 문승우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촉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국회중간감정법 상 국경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전 심나 국경감사·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립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속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절차상 한계를 지적하며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정부가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 의장이 제출한 이번 안건이 관련 제도 정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만호 기자

# “완주·전주 통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완주·전주 시민사회단체 ‘골든타임’ 촉구

완주·전주 통합을 촉구하는 전주와 완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조속한 행정 통합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실무대표 김병석), 전북지방변호사회 가정법원 유치위원회(회장 김정호), (사)완주역사문화추진위원회(공동대표 나유진 마유식),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회장 박진상),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회장 김기대) 소속 대표와 임원 등 40여 명은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전국적으로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북만 결단을 미룰 경우 국가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의 통합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석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실무대표는 “완주·전주 통합은 35년 넘게 논의된 반복돼 온 전북의 숙원 과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완주·전주 통합을 촉구하는 전주와 완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을 강조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충남·대전은 행정통합추진을 공동 선언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광주·전남도 통합을 공식화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인센티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통합 자치단체에는 재정 자율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대규모 산업 유치 등 파격적인 지원이 예정돼 있다”며 “전북이 이 흐름에서 배제될 경우 경쟁력 상실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이 급격한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전북을 살릴 해법은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이라며 “완주·전주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완주 소외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정호 전북지방변호사회 가정법원 유치 위원장은 “그동안 통합에 비판적이었으나, 국가 전략 산업 유치 환경

이 급변하면서 판단을 재고하게 됐다”며 “조례가 아닌 국회 제정 특별법을 통해 완주 보호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피지컬 시 등 미래 전략 산업은 도시 규모와 행정 일관성이 핵심”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완주 지역의 권한과 역할을 법으로 보장한다면, 통합은 완주의 흡수가 아니라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북 지역 국회의원 전원의 통합 추진 공개 선언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와 행정통합추진 결의 안 조속 의결 △민주당 전북도당의 당론 채택과 중앙정부 협의 추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전북의 산업·인구·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결단을 미룰수록 전북의 미래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방선거 선거구 결정 이전인 2월 안에 정치권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오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